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레이건 대통령과는 달리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 것이라는 징후는 없었다.

국방성 관계자들은 부시가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칼루치 국방장관에 의해 당초 계획보다 6백억불 가량의 국방예산이 삭감되었고, 이 예산안이 더이상의 삭감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부시가 총 국방예산의 규모를 대폭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 시대와 다른 점은 1월 이후에 부시가 어떠한 안전에 주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공화당 행정부에는 그들이 원하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내에서 열심히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高價품목록

군은 부시가 항공모함, B1B와 B2(스텔스) 폭격기, 개량전술전투기, MX/Peace Keeper와 Midgetman 미사일, V-22 Osprey(경사회전익), M1A1 Abrams 주전차, 경헬기실험(LHX), 정찰/공격헬기사업등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한 개발 및 생산사업만으로도 국방성의 89회계년도 연구·개발 예산과 90회계년도 예산계획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중에서 3가지만 폐지하면 앞으로 5년동안에 예산적자를 3분의 1이상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의회나 부시에게는 이들중 어느 하나라도 폐지하는 것이 무모하고 비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이미 생산중에 있으며 대부분이 서방세계의 안보에 필수적임이 인정되어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구입해야할 함정, 항공기, 미사일, 전차등의 수요를 감축함으로써 국방비를 절약하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일부 극단적인 국방 지지 의원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함으로써 예산안의 비용균형을 깨뜨리고 예산배정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중에 온건한 표현만을 사용했던 부시가 강력한 미국의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였다.

예산감축의 압박이 가해지자 칼루치 국방장관과 각군 수뇌들은 오로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의회에 의해 사업을 폐지당하느니 그들 스스로 예산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최소한도 앞으로 5년간은 이러한 압력이 계속 가해질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예산이 89회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관측통들은 국방예산이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일이 부시의 국방 예산정책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관측통들은 「적은 경비로 강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부시의 두 번째 목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은 현재보다 포괄적인 국방성의 획득전략 즉 일종의 「국방조달계획」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부시는 취임후 가능하면 빨리 미국과 동맹국들의 계약자가 참여하는 장기계약 및 공동사업등과 같은 국방조달 기술에 주력하게 될지도 모른다.

부시의 3번째 목표는 그의 재임기간중에 현재의 가격과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여러 사업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관측통들은 부시가 더이상의 SDI 감축을 반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SDI에 대한 부시의 의견을 타진하였

을때 그는 SDI 연구가 신속히 완결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과학적인 확신과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주에 기지를 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저지망의 개발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다.

• 부시와 NATO

부시는 미국과 NATO간의 산업협력을 강조하면서 그의 재임 초기에 NATO와 관련한 미국의 방위비를 최대한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퀘일 부통령을 이러한 노력에 투입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가 이러한 정책과 병행하여 유럽동맹국들로 하여금 방위비 분담을 늘리도록하는 노력도 함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부시의 연두교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분석가들은 부시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참모들이 그에게 방위비 분담문제에 있어서의 변화는 두가지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의 증가가 한편으로는 경비를 절약하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부시는 현재의 유럽의 지지기반을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또한 유럽은 방위비 분담의 댓가로 보다 많은 기술이전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들여 미국장비를 구입하는 일도 없게 될것이다.

분석가들 중에 또 다른 이들은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언급한다면 전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입에 발린 소리만하는 격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NATO에 대한 동맹국들의

기여가 증대되지 않는다면 NATO에 대한 지출감축을 무기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전략군감축회의와 MBFR회의에서 소련과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 연구 개발 사업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부 군대를 철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군사적 태도에 그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부시가 안다면 그는 국방예산의 연구개발 항목에 주의하게 될것이다. 그리고는 몇몇 주요 사업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할 것이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부시와 국방성 수뇌들이 그어떤 분야 보다도 연구·개발과 이에 부속하는 조달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부시가 예산삭감을 감수해낼 분야는 무엇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처음으로 손댄것은 몇몇 국내기지의 폐쇄이다. 부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별 언급이 없었다. 그가 작전훈련과 설비, 연구·개발과 장비획득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국방예산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선택을 해야할 경우, 부시가 국방장관을 도와 5가지 정책(첫째, 현재의 국방비수준을 고수. 둘째, 포괄적인 가격절감 획득계획 즉 "국방조달계획"을 추진. 셋째, 서방세계의 안보에 필수적인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하지만 경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그 개발과 생산을 연기. 넷째, 미국과 NATO간의 산업협력 증대. 다섯째, 연구·개발비용의 우선적인 확보)을 집행한다면, 그는 일거양득할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획득할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MILTECH 88/12〉